

전남 농산물 한가위 수도권 공략

서울광장·정부청사·구청 등 직거래 판촉활동

지자체·농가·업체 공동, 안정 판로 확보 총력전

민족 대명절인 추석(22일)을 앞두고 전남도와 도내 각 시·군, 생산농가, 업체가 함께 농수특산물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판촉활동에 나섰다.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는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생산자단체는 농특산물의 판매·소비처 확보를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8~12일 서울광장

과 청계천, 무교로 등에서 열린 '전국 농수특산물 한마당 장터'를 비롯해 경마공원 직거래장터·정부청사 직거래장터·서울 지하철 행복열차(첨단역) 및 역사내 직거래장터' 등 37개 장소에서 41차례의 직거래 행사를 열었다.

이와 함께 도내 시·군과 수도권 자매결연 구청이 합동으로 주관하는 직거래행사도 총 43회 열리고 있다.

나주시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명품 나주배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와 과천

청사, 동대문구청의 판촉활동 및 수도권 공략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영암군은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및 경기도 등 10여개 장소에서 대규모 직거래장터를 개최, 영암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은 오는 21일까지 전국 대도시 백화점과 마트 등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 지역특산품인 전복·미역·다시마·김·멸치·쌀 등을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촉 서비스에 밟았고 나섰다.

함평군 관계자는 "행정과 생산농가, 업체가 공동 참여해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3억7000여 만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 자체단체 7개소에서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펼치고 있다.

판촉행사에는 관내 11개 업체가 참여해 나비씰·함평현지한우·레드마운틴(복분자·와인)·잡곡류 등 12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군은 판촉행사와 함께 다음달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함평 옥스포공원에서 열리는 '2010 대한민국 국향대전' 홍보활동도 펼친다.

함평군 관계자는 "행정과 생산농가, 업체가 공동 참여해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3억7000여 만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최근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소장 정석원) 주관의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한복을 입어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다문화가정 12가구를 대상으로 송편 빙기와 절 예절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제공〉

영암 내년부터 모든 학생 무상급식

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까지

영암군은 내년부터 도내에서 처음으로 보육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 까지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군은 당초 내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모든 학교로 늘려나갈 계획이었지만, 최근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재원 부담 협의가 원만히 진행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초·중학교는 도, 군비 각각 25%에 도교육청이 50%를 지원하고 공립유치원과

고등학교·특수학교는 도교육청이 100% 지원한다.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은 전액 군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 19억원을 포함해 모두 50억원으로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 96개 학교 96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진환경 무상급식은 학생의 건강뿐만 아니라 농민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충북취재본부=박선태기자 pjs@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보성녹차 열기

입점 론칭 행사 성황… 2달간 특별기획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진출한 보성녹차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이 뜨겁다.

13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입점 론칭(Launching)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10월 말까지 두 달여 기간 동안 세계적인 차 전문업체인 하스엔하스(Haas & Haas) 매장에서 '보성녹차 특별기획전'을 갖는다.

행사기간 동안 보성군과 하스&하스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Korea Boseong Green Tee - Haas & Haas Wien' 공동 브랜드로 보성녹차를 오스트리아 전역에 알릴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최대 발행부수를 차지하는 크로렌 사이퉁(Kronen Zeitung)지를 비롯해 주요 언론들은 "한국 녹차와 흥차는 비엔나의 경험 많은 감식가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맛과 향이 좋다"고 평하며 보성녹차의 수출전망을 밝게 점치기도 했다.

보성녹차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되면서 관심 있는 비엔나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정종해 보성군수는 "보성녹차에 대한 오스트리아 현지인들의 반응이 좋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품질유지와 농량확보, 세계적인 차들과의 가격경쟁을 위한 원가절감 등이 과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면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3년간 세무조사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선태기자 mihang@

여수 소기업·소상공인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여수시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및 경영사정이 어려운 관내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영세·성실기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있는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이 달까지 개정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기업·소상공인도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면제대상은 업종별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종업원 50명 미만인 업체가 소기업에 해당되며,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업체

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면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3년간 세무조사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선태기자 mihang@

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면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3년간 세무조사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선태기자 mihang@

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면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3년간 세무조사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선태기자 mihang@

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면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3년간 세무조사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선태기자 mihang@

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면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3년간 세무조사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선태기자 mihang@

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면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3년간 세무조사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선태기자 mihang@

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면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3년간 세무조사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선태기자 mihang@

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면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3년간 세무조사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선태기자 mihang@

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면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3년간 세무조사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선태기자 mihang@

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면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3년간 세무조사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선태기자 mihang@

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면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3년간 세무조사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